

의안번호	제 709 호
의결 연월일	2021년 4월 21일 (제390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제안자	정책복지위원장
제안연월일	2021년 4월 21일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709
----------	-----

제안연월일 : 2021년 4월 21일

제안자 : 정책복지위원장

## 1. 제안이유

-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약 125만톤으로 오염수 안에는 혈액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스트론튬-90, 고농도의 세슘, 코발트-60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및 전 세계의 해양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반환경적 결정이라 할 것임.
- 이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와 방사능 오염수 관련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국제사회의 검증 수용을 촉구하고,
-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관리 및 금지 조치 확대, 국내 해역 대상 방사능 유입 검사 강화 등 국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함.

## 2. 붙임 : 결의안

- ### 3. 보낼 곳 : 대통령비서실, 대한민국 국회,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환경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25만톤은 이미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1차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탱크 안 오염수 속에는 골수에 축적돼 혈액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스트론튬-90 이외에도 국제적 배출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는 고농도의 세슘, 코발트-60,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일본정부가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는 수산물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내부 피폭을 유발하는 삼중수소를 제거할 수 없다는데 있다.

한편,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고 당시에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의 기준을 국제적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는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서 공표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2013년에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정보 공개를 금지시키는 등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차단해 오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보여 온 행태가 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2차 정화를 통해 주요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을 내 놓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정화하기 위해 가동 중인 ‘다핵종 제거 설비’ 3개 중 2개는 일본 정부의 최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안전성 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의회는 더 이상 일본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및 전 세계의 해양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반환경적 결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또한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라는 의견으로 사실상 오염수 방류 지지 입장을 표명한 미국 정부와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는 지구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인류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릇되고 부적절한 행위로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충청북도의회는 충청도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내일을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를 준수하여, 도민의 우려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반드시 철회하고 공개 사과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사 결정 과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국 등 관련 국가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검증을 수용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관리 및 금지 조치 확대, 국내 해역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유입 검사 강화 등 국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1. 4. 21.

충청북도의회